

#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금지 부당해”

### 조만간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 행정 소송 예정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안해...방역수치 지키며” 文대통령 “불법집회 강행 계획하는 분들 자제 부탁”

경찰이 개천절 도심 집회 신고단체에 금지통고를 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 비대위는 개천절에 1000명 이상 규모의 집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2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아침 회의에서 행정소송을 내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준비를 해야해서 당장 내일(24일)은 못 내지만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조만간 개천절 집회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치방역적인 불편한 말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협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8·15집회는 문 대통령의 폭정과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7월말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됐다며 휴가를 권장하고 연휴를 만들던 정부가 합정을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보는 대통령의 국민협박에 우리가 답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집회 강행의지를 보였다.

최 사무총장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협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8·15집회는 문 대통령의 폭정과 정책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며 “그런데 7월말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됐다며 휴가를 권장하고 연휴를 만들던 정부가 합정을 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보는 대통령의 국민협박에 우리가 답을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집회 강행의지를 보였다.

최 사무총장은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1000명 규모의 집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보수단체가 고려 중인 차량을 이용한 방식(드라이브스루)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개천절과 한글날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한 상태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석본)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천절 집회를 취소하거나 계획 재검토에 들어갔다.

하지만 8·15비대위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들은 지난 8·15 광화문 집회 당시에도 서울시가 집회를 금

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다수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용하지 않았지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8·15 집회 당일 집회가 허용되지 않은 다른 단체들이 국본과 일파만파의 집회에 합류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집회에 참여한 것이 드러나고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인용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정승호 기자

## 차량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20대 ‘덜미’

전북 군산경찰서는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등)로 A(20)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를 운전한 뒤 주차하는 과정에서 옆 차량과 부딪쳐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다가 차 키를 발견, 30여분간 시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마스크 쓰라’ 역무원·사회복무요원 폭행한 50대 입건

인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한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9시5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하철 2호선 주안역 승강장에서 역무원 B(40대)씨와 사회복무요원 C(2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역무원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가짜 검사’ 행세한 보이스피싱...엄마 유산까지 뜯어가

경찰이 ‘가짜 검사실’로 피해자를 속여 약 1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에게 약 1억4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통장이 종교나라 사기에 연루됐다. 가해자인지 명의로 용 피해자인지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여러 명이 돌아가며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지시와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상통화를 통해 ‘가짜 검사실’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A씨에게 법무부 애플리케이션(앱)이라며 속인 후 악성 앱을 다운로드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일상은 이 앱을 통해 감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주택청약, 어머니 유산 등 약 1억4500만원을 인출해 수사관을 사칭하는 남성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을 수거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 1명을 경기 남부에서 붙잡아 조사했다”며 “인적사항 불명의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 20대남 음주운전, 동승 30대녀 사망...‘윤창호법 적용’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음주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 연희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트라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 B(30대·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경추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A씨도 사고 당시 고관절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한 뒤 ‘윤창호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조두순 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결심”

### “정부가 나서서 법에 따라 가족 주거안정 지원해야”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는 이날 오후 1호 법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설명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

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오늘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예외조항을 뒤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

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나?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정 기자

## “2차 재난 지원금” 위장 스미싱 주의보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은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 문자를 방자한 ‘스미싱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안내를 방자한 스미싱 문자메시지 속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 소액 결제가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지난 제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에도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등의 스미싱 문자가 발송돼 소액 결제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으므로 발송자가 확인되지 않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인터넷 주소(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해서는 안 된다”며 “지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도 링크 주소를 클릭하기 전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옥 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